작통권 환수 2009~2012년 '애매한 절충'

한-미 안보협의회 합의

'확장 억제' 명시 핵우산 제공 구체화

美 "PSI 정식 참여해 달라" 공식 요청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20일(현지시간) 군 최고위급 회담인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잇따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약속하는 등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09년 10월15일 이후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로 결정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국(2009년)과 한국(2012년)의 입장을 절충한, 어찌 보면 협상 타결이라고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모호한 문구지만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측 주장인 2012년이 관철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고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확인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핵우산 제공**=우리측이 관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공약도 훨씬 구체화됐으며 강화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14개항의 공동성명 중 3항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뜻하는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안보정책의 핵심교서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3국이 미국의 동맹 우방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자국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신속한 핵우산을 전개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한미가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버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략 지시'를 내렸다는 우리측 합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미 측이 강하게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군사 지휘 체계**=전작권 환수와 핵우산 문제가 관심의 우선 순위였지만 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될 한미 군사 지휘체계에 양측이 합의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 합참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MCM에서 서명된 지휘관계 연구보고서는 현행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통합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공동으로 맡는다는 것이다.

◇**미국, PSI 정식 참여 요청**=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동 기자회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核 변수?…이명박 독주 조짐

■**핵실험 이후 대선주자 지지도 변화**

박근혜 前대표와 격차 크게 벌려

고건 급락·손학규 미세한 상승

북핵 사태가 내년 대선정국을 가르는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9일 북핵 실험 이후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 뚜렷한 지지도 변화가 나타나 대선주자군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급상승하고, 고건 전 총리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아직 1~3%대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5%의 벽에서 주춤하다가 미세한 상승세가 감지되는 형국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이 32.1%로 박 전 대표(19.5%)와의 격차를 12.6%포인트 차이로 넓혔다. 이는 지난달 중순 실시한 조사에서의 두 사람의 격차인 6.2%포인트보다 2배 이상 벌어진 수치.

일반 여론은 당심(黨心)에도 영향을 미쳐 한길리서치가 인터넷신문 '프레스 25'의 의뢰로 18일 한나라당 대의원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바람직한 한나라당 후보로 이 전 시장이 35%의 지지율을 기록, 1위인 박 전 대표(37%)를 2% 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이같은 지지도 변화가 모두 북한 핵실험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대선주자군은 핵실험 파문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대선후보에 대한 선호도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시각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감지됐다. 이 전 시장측은 위기상황에서 경륜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적극 해석하는 반면, 박 전 대표측은 언론노출 빈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손 전 지사측은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100일 민심대장정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100일 민심대장정을 끝마치는 날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지면서 대장정 효과가 묻히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 전 총리측은 북핵 문제가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지지율 급락에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정책과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근태 의장은 대북 포용정책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전통 지지층과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음으로써 약세 탈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20일 개성공단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춤 파문'의 여파로 다시금 어려움에 처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장점을 살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쳤다"

김근태의장 '개성 춤 파문' 논란 가열

열린우리당 내에서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춤 파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여성 안내원과 춤을 춘 해프닝은 안내원의 거듭되는 강권 때문에 30~40초 정도 무대에 나간 것 뿐이라는 게 김 의장 측의 주장이지만, 당내에선 의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당내 진보세력이 김 의장 엄호에 나선 가운데 당내 중도·보수파를 중심으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노선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도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당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쳤다"며 "10·25 재보선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개성공단 방문을 반대한 당내 인사들이 '그것봐라'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이 계속 비판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도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짧은 해프닝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춤판이든 율동이든 이건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김 의장을 옹호했다. 또 "본말이 전도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장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함께 무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수를 치는 모든 분들에게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엿보았다"고 설명한 뒤 "북핵실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식당 종사자의 권유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간애의 발로"라고 김 의장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라이스 '北核 순방' 절반의 성공

4개국 "北 핵보유 불용" 한 목소리

제재 이행 방안은 합의 못 끌어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된지 사흘만에 서둘러 시작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순방이 21일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쿄와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닷새간의 강행군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일본, 한국, 정부, 러시아 당국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력했다.

또 북한의 핵기술이나 장비의 확산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가담하거나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스 장관이 만난 각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것이야 말로 이번 라이스 장관 순방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으로부터 북핵 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란 다짐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대한 일치된 지지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은 PSI 참여 확대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도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란 다짐만 했을 뿐,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측과 이견을 나타냈다.

강력한 대북제재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한 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보다도 강경한 일본 뿐이었던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순방이 큰 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얻어낸 구체적인 약속이나 다짐은 거의 없었다는게 외신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연합뉴스